

# 광주시, 정부에 '3중 복합 위기 해결' 협력 호소

### 지방 세수 감소·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오염수 불안 대책 시급 강기정 시장 "이념 논쟁 접고 경제 대응"...기업인 만나 자구책 모색

광주시가 정부에 지방세수 감소 등 '3중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4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 일본 오염수 불안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3중 복합 위기' 대응에 협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주 동안 광주시청 광장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철 지난 이념논쟁의 중심지였고

지향점 없는 색깔론 현상이었다"며 "이제 이념 논란을 종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정유성 사업은 국익을 앞세운 국제관계에서 영리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외교적 인식에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북방정책에서 한중 우호와 문화교류 차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정부에) 다시 한번 호소드린

다. 정유성 역사공원 사업은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믿고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 평소 정부를 상대로 소신발언을 이어왔던 강 시장이 이례적으로 협력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3중 복합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복합 위기와 관련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전국 자치단체에 보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8조5000억원(11.3%) 감소하고 광주시 지방세는 연말까지 작년 대비 2515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광주시는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800억원 구

도의 보증을 지원하고 시비로 특례 보증까지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복합 위기'가 지역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기업인들과 연이어 만남을 갖고 현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윤택립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장과 김선미 ㈜티디엠 대표, 문대선 ㈜케이제이메디텍 대표, 김재일 에니젠㈜대표, 한동철 ㈜아이코디 전무 등 지역 의료산업 기업인들을 만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조철연 에스디엠 대표, 오명진 ㈜엠테크

코리아 대표, 김근보람 ㈜현대금융 이사, 최지희 ㈜효광 이사, 조재훈 ㈜광우파이텍 이사 등 광주 대표 뿌리산업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부족한 현장근무 인력과 수출 지원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광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지역기업들이 하나같이 '금융난', '인력난', '판로난'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3중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의료 최대 취약지 전남·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양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행사에는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등 3개 대학 총장 등이 함께했다. <전남도제공>

### 김영록 전남지사, 경북도와 대정부 공동 건의문 발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등도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

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분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도와 경상북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이룬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지역 아이들과 산모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여 지역 기초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실제로 두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다. 올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남·경북을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 등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물가 관리 2년 연속 '우수'

### 공공요금 안정·착한가게 운영 등...18개 시·군 입상해 전국 최다

전남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5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고물가 시기에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안정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행안부의 시·군 평가에서도 목포시 등 6개 시·군

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상을 받는 등 광역 시·도 중 전남이 최다 입상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시·군의 상수도료 감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민들께서 동참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경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 시의적절한 물가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산하기관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 시의회 여성의원 '의기투합'...조례안 내일 본회의 상정

광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광주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최소 1명의 여성이사를 두는 조례안 5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주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여성이사 배치를 의무화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정다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광주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산업건설위 소속 김용임(국민의힘) 의원이 '광주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나운·임미란·이귀순 의원 등 나머지 여성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환경복지위 소속 박미정(민주) 의원이 '광주환경공

단 설치 조례'와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당원직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여성 이사 1명 이상을 채용해야하는 강제규정인 셈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신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도시공사와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의 최근 5년 간 남녀 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여성 상임이사가 단 1명도 없었고, 환경공단의 경우에도 2017년에만 단 1명 있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